「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1월10일(월)
통권1호(제1권 제15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메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공업지구소개 8

강계공업지구의 지역 인프라 및 산업 입지

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강계공업지구는 강계, 만포, 희천, 전천을 중심으로 공작기계, 정밀기계 및 군수품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강계시는 자강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장자강과 북천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되어 있다.

자강도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3성과 마주하고 있어 오랫동안 만주족과 교류가 활발했던 관계로 언어 등에서 만주족의 정치적 영향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아울러 산삼의 산지로 유명하며 이의 상업거래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강계지역은 밭농사와 과수농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재배곡물로는 옥수수와 벼가 곡물재배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봉, 맥류, 땅콩과 수수, 메밀을 재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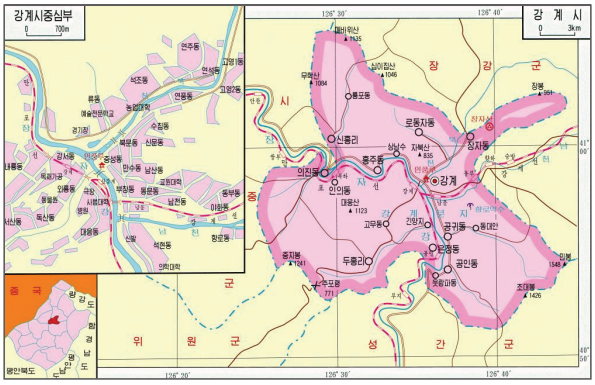
강계를 포함한 자강도 지역은 잠업이 발달했으면, 경사지역을 중심으로 과수재배를 하고 있다. 한편 풍부한 자연초지를 바탕으로 축산업이 발달하여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여, 강계에는 비교적 현대화된 양돈장 및 축산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강도는 북한내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자원이 적은 편으로 비교적 대규모의 탄전은 전천탄전(매장량 24백만톤)을 비롯해 고풍탄전(매장량 0.8백만톤), 신적탄전(매장량 1백만톤) 등이며 무연탄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자강도의 주요 광물자원으로는 흑연, 구리, 납, 아연, 금, 중석, 철 등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흑연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품위가 높아 북한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

강계공업지구는 북한의 내륙지대로 전천, 희천, 만포, 강계시를 포괄한 지역으로 군수와 관련된 정밀공업과 섬유공업이 주로 발달했다. 강계를 포함한 자강도는 기계공업이 근간을 이루며 도 공업생산액의 27%를 차지하고, 방직 및 피복공업 19%, 임업 및 목재가공 10%, 일용품공업 8%, 식료품공업 7%, 전력공업이 7%를 차지하고 있다.

강계공업지구를 포함한 자강도는 지역개발에 있어 위치상 휴전선이나 해안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부내륙지역이라는 점에서 북한 기계나 군수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또한 도 내에 철, 구리, 무연탄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납, 아연, 혁연 등이 생산됨으로써 도내에 주요 공장과 기업을 배치, 북한 최대의 군수공업기지로 육성이 가능했다.

장자산발전소



강계시 지역은 기계공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고영동에 농기계와 양수기를 생산하는 강계농기계공장과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강계건설기계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희천시 지역은 자강도 기계공업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북한에서 가장 큰 공작기계공장인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이 있으며, 그 근방에 운전기계부속품류를 생산하는 2월26일공장이 인접해 있다.

전천읍의 장자강 오른쪽의 전천착암기공장은 종업원수에서 전국적인 규모이며, 만포시에는 자강도의 임업과 관련한 만포임업기계공장이 임업과 관련한 기관차, 대차, 기중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만포시의 압롱강타이어공장은 북한에서 제일 큰 타이어 생산공장이며, 시멘트를 생산하는 8월2일시멘트공장과 재봉기 및 부속품을 생산하는 만포재봉기공장이 있다.

식료품 분야에도 비교적 대규모 공장이 분포해 있는데 강계시에는 주류, 장류 등의 가공공장이, 만포시에는 장류, 과자류, 육규 가공공장이, 희천시에는 장류, 주류, 채소가공공장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강계지역에서 제품 일부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계연필공장과 지방특산물인 '인풍술', '포도술' 등을 생산하는 강계포도술공장 등은 비교적 양호한 공장이다. (한국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 저『新북한의 산업(2005년)』중 발췌.)

강계포도술공장의 일부

►제15호 목 차

이주의 칼럼

외교마저 YS를 닮고 싶은가 ---------- 2

이주의 주요 기사

정부 '대북 원칙고수 기류' 배경과 전망 ---------- 3

北식량 지원 예산 삭감 논란 ---------- 4

北매체 "남북관계는 밧줄당기기 아니다" ---------- 5

통일부 '개성공단숙소 내년 예산에 반영' ---------- 6

<오바마와 한반도> 남북관계 영향 '주목' ---------- 7

美오바마 대북 직접협상 대비 개성공단 활성화해야 ---------- 8

北군부, 개성공단 현지 실태점검 ---------- 9

北, 美에는 우호, 南에는 대결 모드 ---------- 10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hip ---------- 11

日本独自に北朝鮮を「テロ国家」指定、民主が追加制裁案--- 11

추천논문 / 11.4 미국 대선 결과와 북미관계 : 전망과 과제 ------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아시아재단 공동 국제워크숍
►주제 : 북한 경제의 현 현황과 향후 전망
►일시 : 2008년 11월 11일(화) 13:00
►장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

●남북 농림·수산분야 교류 협력 발전포럼
►주제 : 남북 농림수산분야 교류협력 전망과 과제
►일시 : 2008년 11월 12일(수) 14:00
►장소 : 양재동 aT센타 3층 중회의실

●2008 제4차 민화협 정책토론회
►주제 : 금강산 관광사업 10년-성찰과 발전방향
►일시 : 2008년 11월 17일(월) 14: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이 주의 칼럼

외교마저 YS를 닮고 싶은가

성한용(한겨레신문 기자)

'설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가 "그 친구 순 '꼴통'이다. 실용주의라고? 속지 말라"고 말했을 때였다. 1년 전의 일이다. 이회창이나 박근혜라면 몰라도 이명박을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착각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취임사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이라는 '조건'을 들고 나왔다. 북한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 정부 스스로 선택지를 좁힌 것이다.

"우리가 밀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상황이 있다.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 자신이 있다."(11월1일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겁이 덜컥 난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실제 상황이 종종 거꾸로 가기 때문이다.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사업에 대해, "북한은 엄청난 통과비를 받아 외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스로 발전을 하게 되면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옳은 얘기는 조심해서 해야 한다. 돈을 줄테니 자존심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욕이다. 못사는 형제와 잘 지내려면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우선 형제로 대접해 줘야 한다. 그래야 집안이 평안하다. 햇볕정책의 요체도 바로 그런 원리다.

10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정책조정회의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하게 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미국 네오콘과 비슷한 것 같다. 부시 정부의 대화론조차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물며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악몽은 반복되는 것일까? 1993년 2월25일 취임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TP) 탈퇴를 선언하자, 뒤통수를 맞았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이유로 대북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핵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핵 연계 전략을 고집했다. '북한은 고장난 비행기와 같아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붕괴 임박론을 믿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자 김영삼 정부는 '몽니'를 부렸다. 1994년 7월 국가안전기획부를 시켜서 탈북자 강명도·조명철 씨가 "북한은 1993년까지 핵폭탄 5개를 이미 만들었으며, 최소한 10개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시킨 일도 있었다. 제네바 합의를 막기 위해서였다. 미국 국무부 관리들의 입에서는 '북한보다 남한과 대화하기가 더 어렵다'는 푸념이 나왔다. 북-미 관계는 풀렸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히 고립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닮고 싶은 것일까? 두 사람의 맹목적인 대북 강경론은 철학의 부재,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터다. 잘 모르면 남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불러 외교·통일·국방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경제는 일시적으로 잘못해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외교는 한순간 실수로 나라가 망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자칫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 '대북 원칙고수 기류' 배경과 전망

-- 11월 3일 연합뉴스

"'대북정책 변화를 기치로 내건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건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힘들더라도 원칙을 지키자'는 기류가 강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3일 대북정책과 관련한 청와대의 최근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의 말은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원칙불변'을 고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직후 '대북사업의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인 만큼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한의 불능화 재개 등을 진전으로 간주,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잠가뒀던 몇 가지 대북 사업들의 빗장을 조금이나마 풀어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된 지 5일 후인 지난달 16일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고 매체를 통한 대남 비방의 빈도를 높이면서 이런 '유화기류'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과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북한의 불능화 재개를 의미있는 비핵화 진전으로 볼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사업 재조정'을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정부 인사 중 대북 유화적 발언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던 김하중 통일장관도 지난달 22일 강연에서 북한을 향해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과 '대통령 비방 중지'를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류는 북한이 강성 발언으로 대남 압박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줄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관계개선 행보에 나서거나, 구체적인 대화 제의를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정리된다.

정부 소식통은 "식량지원도 올해 북한의 작황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지원요청을 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기류가 강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 당국간 대화 제의에 호응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정부 핵심의 기류"라고 전했다

北 학부모도 컴퓨터 게임과 '전쟁중'

-- 11월 3일 연합뉴스

북한 학부모에게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컴퓨터 게임에만 몰입하는 자녀들이 걱정거리다.

평양대마방직 참관단(10.29~11.1)을 안내한 북측 관계자는 남측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아들 녀석이 공부는 뒷전이고 컴퓨터 게임만 하려고 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4년인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중학교 진학 공부에 소홀하다는 고민이다.

이 관계자는 "애 엄마가 직장에 나갈 때 건반(자판)이나 마우스를 숨겨놓지만 어느 틈에 찾아낸다"며 남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숨바꼭질을 전했다.

그는 또 소학교 졸업반인 4학년 학생들이 수재학교인 제1중학교에 진학하려고 자정이나 새벽까지 공부한다면서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후 입시과목인 국어나 수학 소조(동아리)에서 과외학습을 한다고 설명했다.

"中, 내년 3월 안에 두만강개발계획 비준"

-- 11월 3일 연합뉴스

중국이 내년 3월 안으로 두만강개발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동포신문인 연변일보는 "지난달 31일 연길-도문-룡정의 일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룡도 일체화사업 좌담회가 연길에서 소집돼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등개,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룡도당위 서기인 우효봉이 회의에 참가해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의 덩카이(鄧凱) 서기는 회의에서 "명년 3월 안으로 중앙에서는 두만강개발계획을 비준하게 되는데 이 계획은 훈춘을 창구로 하고 연룡도를 전연진지(전진기지)로 하며 장춘, 길림을 복지로 한다"고 밝혔다. 덩카이 서기는 "연룡도의 역할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두만강개발을 다그쳐 추진하려면 연룡도 일체화를 다그쳐야 하며 대개방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옌지(延吉), 룽징(龍井), 투먼(圖們) 등 3개 도시의 통합과 관련해 이들 도시에 30분 이내의 단일 도로망을 연결하는 일체화 개념을 적용, 경제, 산업, 무역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건설 또는 이용하는 내용의 '옌지, 룽징, 투먼시 공간발전계획 요강'이 지난해 6월 지린(吉林)성 정부에 의해 승인됐으며, 이들 도시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옌룽투(延龍圖)위원회가 올해 3월 창설됐다.

북한의 전자제품 공장들 '악전고투'

-- 11월 3일 연합뉴스

북한의 전자공업성 산하 전자제품 공장들이 전반적인 경제난 속에서 "높은 정신력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

를 이겨내며 전자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북한의 평양방송이 2일 이들 공장의 '악전고투' 상황을 2일 전했다.

평양방송은 신기술로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있다는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은 "설비의 이용률을 높여 무충전 전지와 열전대(熱電對.두 가지 금속을 고리 모양으로 접합해 접점사이의 온도차로 열기전력을 일으키게 하는 장치), 온도지시조절기를 비롯한 자동화기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평양조명기구공장은 수입원료를 쓰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있으며, 평양자동화기구공장과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 등도 전자자동화 제품 생산에 진력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전자공업성에서도 "전자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해 발전소들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필요한 전자자동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보내주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식량 지원 예산 삭감 논란

-- 11월 4일 서울신문

통일부가 내년도 일반예산을 8.8% 삭감한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 주도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리면서 민간·국제차원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통일부의 예산 규모를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통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식량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억원 줄어든 1144억원이다.110억원 가운데 80억원이 사업비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2개 사업 중 이산가족 지원을 포함한 16개 사업 비용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통일부의 내년도 신규사업은 단 1건으로 경찰청의 전·의경 철수방침에 따라 하나원 경비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12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신규사업이 없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정부 기금은 65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남북협력기금 중 경수로계정이 아닌 남북협력계정은 1조 3928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왕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남북사회문화 교류 비용은 절반이 감액됐다. 집행 실적 부진이 그 이유다.

인도적 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63.5% 늘었으나 당국차원의 지원액이 두배로 늘었을 뿐 이산가족교류 지원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예산이 줄었다. 국제원유·원자재가 급등을 이유로 당국차원의 지원액을 전년대비 1804억원 늘렸다.

李대통령, 안이한 남북문제 인식

-- 11월 4일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인식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안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명박 직계'인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우리가 밀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상황이 있다"면서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고, 자신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걸어왔다. 개성공단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정부 당국간 의미 있는 대화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남북교류 역시 민간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 남측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조차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남북간 '충돌'이나 '별다른 일' 없이 '조용한 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18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 한 회견에서 "현재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운영되고 있고 (개성에) 관광객은 지금도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절'이나 다름없다. 지난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당시 남측이 직접 북측과 대화를 못하고 현대아산을 통해 '간접 대화'를 한 것은 단적인 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남쪽의 새 정부 출범시 항용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측근 의원들과 가진 만찬에서 "(북한에 대해) 자신 있다"고, 르 피가로 회견에서 "정권이 바뀌면 북한은 항상 초기에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특히 미국이 대선과 함께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전환기에 있는 만큼 미국을 중시하는 북한이 당분간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北내각, 편의시설 운영 '규정' 채택

-- 11월 4일 연합뉴스

북한 내각이 식당과 목욕탕 등 주민 편의시설의 운영

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편의봉사사업 규정'을 채택했다고 3일 입수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10.23)가 전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편의봉사망'은 여관과 식당, 목욕탕, 이발소 등 "편의봉사를 위해 꾸려놓은 시설의 체계"를 말한다.

신문은 이 규정에 대해 "편의봉사망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데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적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편의봉사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생활상 요구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는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 재산 및 재정관리, 편의봉사망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와 편리를 더 잘 도모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 관광 중단에도 투자 지속

-- 11월 4일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 중단이 4개월째에 이르고 있지만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금강산 골프장 운영사인 에머슨퍼시픽에 따르면 아난티 골프장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임직원 250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여명이 상주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식당, 노천카페 등도 오픈 준비를 마치고 객실 내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

에머슨퍼시픽의 아난티 골프장은 코스 전장 7천547야드(파73)에 18홀 규모로 지난 5월말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 라운딩을 진행하다 7월 중순부터 본 개장에 돌입하려 했으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바람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남북관계 개선 제안 봇물

-- 11월 4일 연합뉴스

국회의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버락 오바마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북미관계 개선이 전망되는 상황인 만큼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대북특사 파견,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북미정상회담 독려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클린턴 정부 시절 북미관계가 막혔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 대화의 돌파구를 연 것처럼 남북에서 공히 인정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를 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적성국 독재자들과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공언한 오바마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미 정상회담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정부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우려를 불식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체크하며 지지부진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10.4선언의 이행은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도 투자 대비 1.7~3.6배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10.4선언 계승을 촉구했다.

北매체 "남북관계는 밧줄당기기 아니다"

-- 11월 4일 연합뉴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원칙없이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는 "북남관계 문제를 서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밧줄당기기 경기처럼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북남관계가 밧줄당기기 경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러한 발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서약한 남조선(남한)의 선임자들은 물론 우리(북한) 수뇌부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바라는 7천만 겨레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끼리의 관계"로 "북과 남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것"이지 "누가 끌어당기고 끌려가는 식으로 문제를 설정"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北, 자원개발 대가로 아파트 건설 요청

-- 11월 5일 아시아경제

북한이 자원개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개발권을 제공하는 대신 담보로 평양시에 아파트 건설을 요청하고 있다고 5일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처해있는 상황이어서, 주택개발 및 산업기반 재정비 등을 목적으로 외자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최근 중국 기업 등과 천연광물자원 등의 개발권 부여 협상을 벌이면서 평양시내 1만채 아파트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최근 또다른 외국 기업과 북한산 자갈 채취권에 관한 협의의 조건으로 평양 시내에 주택 건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北인권결의안 참여…남북관계 더 얼어붙나

-- 11월 5일 아시아경제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의안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4일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돼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EU 등이 주도한 결의안에 대해 우리정부도 뜻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결의안은 이달 중순께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 내용을 토대로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북 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제출에 대해 "자주적인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라고 주장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같은날 '부당한 인권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특히 일본을 지목, "일본은 전대미문의 인권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인권에 대해 논할 여지도 없다"며 "오늘 일본은 타민족에 대한 극심한 배타주의로 지난 시기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인권죄악을 덧쌓고 있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북핵검증 합의 '시료채취' 빠져…韓·日,美에 유감표명"

-- 11월 5일 동아일보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북한 핵 검증 방식에 당초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시료채취(sampling)' 방식이 제외된 것을 최근 확인하고 미 국무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 정부가 인터넷에 공개한 '검증 이해사항'과 실제 북-미 간 합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국무부가 통보해 왔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이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평양에서 북한과 체결한 A4용지 3쪽 분량의 비공개 합의문에는 강력한 검증 방식인 시료채취에 대한 합의가 빠진 채 '과학적 방식으로 검증한다'는 문구만 포함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미 국무부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직후 인터넷에 공개한 '검증 이해사항(Understanding of Verification)'에는 "북한 핵은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검증 방식'으로 확인한다"고 돼 있다.

통일부 '개성공단숙소 내년 예산에 반영'

-- 11월 5일 연합뉴스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립 비용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숙사 건설과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관련 예산을 반영,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책정한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가 3만5천명을 넘기면서 개성 외 지역에서 인력을 충원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숙소 건립 문제가 공단 관련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숙소 건설 문제에 대해 "북핵 불능화가 잘 진행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일본 외 다른 나라 석유 받겠다"

-- 11월 5일 연합뉴스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제공하는 중유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외무성 관리가 4일 밝혔다.

외무성 소속 연구원인 리평덕 씨는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참가국인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중유를 다른 나라가 제공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t이 보장되기만 하면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소위 납치 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리 씨는 또 일본이 제기하는 납치 문제에 대한 조사를 언제 시작할 지는 일본이 얼마나 빨리 지난 8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북한과 일본 양국은 지난 8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고 일본은 북한이 재조사를

시작하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리 씨는 "만약 일본이 내일 제재를 부분 해제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도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와 한반도> 남북관계 영향 '주목'

-- 11월 5일 연합뉴스

미국 대선 결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사실상 당선되면서 남북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독재국가의 지도자와도 직접 대화하겠다고 공언한 오바마 당선인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2012년까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체제의 '인프라'를 깔고 싶어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상대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룰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방법론상의 차별성이 있지만 오바마 역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중시하기에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핵을 포기한다는 결단을 보여주지 않는 한 북미관계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만만치 않다.

또 민주당 정부의 특성상 '비핵화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모토로 정치적인 일괄 타결을 추진한 부시 행정부 말기의 대북 접근법과 달리 북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까지 테이블 위에 올린 채 단계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어 관계 정상화까지 지루한 '줄다리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가 독재국가의 지도자와 대화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총론을 밝힌 것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 밟아야 할 단계들을 뛰어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 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음에도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은 북한이 지금처럼 우리 당국과 대립각을 세워가며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특히 대북 관계 개선을 '선물' 개념이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 및 정상국가화의 길로 이끄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오바마 진영의 대북 구상이 현실 정책으로 입안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북·미관계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며 순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北김정일, 연일 공개 활동…공연도 관람

-- 11월 6일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대 2곳을 시찰한데 이어 중앙예술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며 연일 공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등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새벽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공연의 정확한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과 '은하수', 만수대예술단, 피바다 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등 북한에서 정통 음악과 무용을 공연해온 예술단체들이 참가했다. 특히 '은하수'라는 이름의 예술단체는 이날 처음 공개돼 구성과 성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언론이 지난 2일 김 위원장의 북한군 '만경봉'팀과 '제비'팀 간 축구경기 관람, 5일 인민군 제2200부대와 제53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시찰에 이어 이날 김 위원장이 대중들이 모인 곳에서 공연을 지켜봤다고 보도함으로써 지난 9월9일 정권 수립 60주년 노농적위대 열병식 등 기념행사 불참 이후 북한사회 내부에 퍼져있던 '건강이상설'을 완전히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북·미관계 개선, 반대할 이유 없다"

-- 11월 6일 뉴시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6일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대북관계에서 한·미공조가 튼튼히 이뤄지는 가운데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북핵 문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도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말은 실제와 맞지 않다"면서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대북정책을 풀어가려는 입장이므로,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풀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원칙은 북한이 성의를 표하는 만큼, 행동에 돌입하는 만큼 우리도 행동을 취하겠다는 '행동 대 행동'인데, 미국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오고 공동번영 시대를 열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분리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대북인권결의안서 '6·15, 10·4선언지지' 빠져"

-- 11월 6일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서 지난해 결의에 포함됐던 6.15공동선

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이 "당초 (초안에) 포함됐다가 실제 제출안에선 삭제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현재 유엔에서 회람중인 대북 인권결의안을 입수했다며 "이번 결의안에는 올해 초 출범한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함에 따라" 두 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이 삭제됐다고 전하고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남북대화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문안이 완성된 뒤"라고 말했으나, '문안에 우리 정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전에도 문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본 초안 이전에 또 다른 초안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본 초안에는 처음부터 두 선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지난해 담겼던 10.4선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작년엔 10.4선언 직후여서 담겼을 것인데, 문안은 1년마다 있었던 일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핵시설 샘플채취 불허 통보"<교도통신>

-- 11월 6일 연합뉴스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북한내 핵시설 검증을 위한 샘플 채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서울과 워싱턴발 기사에서 협상 소식통을 인용,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15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박 외무상은 당시 회담에서 북핵 당사국들에게 핵시설 접근과 핵프로그램 관련 자료 논의 및 해당 인력과의 인터뷰는 허용하겠지만 검증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북한 영토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시설 검증을 위해 샘플링을 포함한 과학적 절차를 이용하는데 북한이 합의했다는 지난달 11일 미 국무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밝혔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장치로 샘플 채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美오바마 대북 직접 협상 대비 개성공단 활성화해야

-- 11월 7일 매일경제신문

버락 오바마 미국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내에서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만 대화하고 한국을 따돌린다)' 전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더욱 활성화해 북한의 통미봉남 시도를 간접적으로 무력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북 관계는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최근에는 북한 측이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에서 큰 역할을 했던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의 방북마저 경색된 정세를 이유로 불허했을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북미 협상이 빠르게 진척되고 오바마·김정일 회담마저 열린다면 김영삼 정부 시절 현실화됐던 통미봉남이 재현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제와 남북 분야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봉남'의 현실화를 막자고 제안했다.

개성공단 규모가 확대돼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북한이 남측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남북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국내 내수 부문에 어려움이 있어 과도한 투자를 하기 어렵겠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바로 진척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협력이 깊어질수록 통미봉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남한이 먼저 북한에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정치적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李대통령, 남북관계 결단해야"

-- 11월 7일 연합뉴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7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앞으로 6자회담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협상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아 북미관계가 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회견을 갖고 "나라 안팎의 달라진 상황을 직시하고 냉전적 대북대결 기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택한다면 미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연결돼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상황에서도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한다면 우리의 외교적 고립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역사적 여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없는 재개 ▲남북당군간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 경주 등 남북관계 일괄타결의 4대 해법을 재차 제시했다.

홍정욱 "'비핵개방 3000' 전면 재검토해야"

-- 11월 7일 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7일 "대북정책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면 사실상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홍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전망하며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도 아울러 냉각이 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를 상기하면 이같은 현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북미관계 전망과 관련, "국교 정상화나 정상회담이라는 구체적인 틀로 이어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미공조를 아주 공고히 해서 북한의 통미봉남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 "대북정책 수정 필요 없다"

-- 11월 7일 헤럴드경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북정책 수정론과 관련해 "우리의 대북정책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 공조 인적인 면에서나 정책면에서나 어려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페리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있었고 미국에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북한의 조명록 대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미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경험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북한이 지난달 북미 핵 검증 합의에서 시료채취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미북간 검증핵심 요소로서 많은 협의가 있었고 미북이 협의한 과학적 절차라는 것이 시료채취란 점으로 이해해주면 어려움 없을 것"이라며 "미북간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선신보] "오바마 당선, 한반도 정세 새국면 조짐"

-- 11월 7일 연합뉴스

북한 언론매체가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 사실조차 아직 보도하지 않는 등 북한이 오바마 후보의 당선에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7일 "미국에는 '변혁'을 호소하는 대통령이 등장하였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발전이 새 국면에 들어설 조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위험계선 넘어선 대결자세-1'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 국면 조짐'으로, 북핵 6자회담 합의 이행으로 "핵문제의 해결과정이 다시 궤도"에 오른 점과 함께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꼽았다.

그러나 남북한은 "대조적으로 첨예한 대결구도에 놓여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그 원인이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라는 "북남 수뇌합의를 부정"한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한미간 5029계획 논의 등을 비난했다.

신문은 특히 남한에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대한 경계론이 제기되지만 이는 "자업자득"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조선(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게 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통미봉남'의 구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北군부, 개성공단 현지 실태점검

-- 11월 8일 연합뉴스

북한 군부가 지난 6일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부 조사단 6명이 6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입주 업체 및 기반 시설들에 대해 실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앞서 5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조사단 방문 일정을 남측에 통보했으며, 당일 실사에는 우리 측 인사인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조사단원들은 '실태요해'를 명목으로 공단을 방문, 현지 법인장과 공장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오전 중 11개 입주업체들을 돌아보고, 오후에는 정수장과 오.폐수 처리장 등 기반시설들을 둘러봤다"며 "또 남·북측 근로자 수, 업체 현황, 봉급, 작업환경 등을 묻고 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조사단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철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취지의 언급까지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北, 美에는 우호, 南에는 대결 모드

-- 11월 8일 노컷뉴스

오바마 시대를 맞아 북한이 대미 접근을 가속화하는 반면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은 미 대선 이후 오바마 진영과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외무성 리근 미주국장은 7일 뉴욕에서 오바마측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와 만났다.

양측의 회동은 비공개로 이뤄져 대화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리를 함께했던 헌터대 도널드 자고리아 교수는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의 정권 이양기간 동안 '계속성'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고 전했다. 자고리아 교수는 또 "대화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으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은 지난 2년간 미 협상파가 주도해온 북미 협상이 새정부 출범에도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리근 국장은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출범해도 그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리 국장의 발언 요지는 "(미국의 새정부가) 대화를 추구하면 대화하고, 고립을 추구하면 그에 맞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면서도 대화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만 특별히 답변한 것인 만큼 미 차기 정부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북 '개성공단 철수' 압박…남 "북한에 굴복 안해"

-- 11월 10일 연합뉴스

북한 군부 조사단의 지난 6일 개성공단 방문·실사(<한겨레> 8일치 1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심리전에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9일 "7일 정부 대책회의에서 북한 군부의 개성공단 조사는 남쪽의 반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위 성격의 심리전이라고 규정했다"며 "정부는 공식 대응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쪽은 과거처럼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북한의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김영철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은 지난 6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6시간 남짓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남쪽 관계자들에게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 등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잇단 개성공단 관련 압박이 당장 '공단 폐쇄' 등의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폐쇄할 경우 북쪽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의 대외 신뢰도를 무너뜨려 '오바마 당선'에 맞춘 북-미관계 개선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군부 조사도 추가 행동을 예고한 것이기보다는 군부가 전면에 나서 '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남쪽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결 구도에 입각한 정부의 '무시' 전략은 오히려 북한이 압박의 강도를 높이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남쪽이 전향적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북쪽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지원 인력 일부를 철수시키는 등의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hip
남북 관계의 악화

-- 11월 4일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출처: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8084Kim.html

Tong Kim, Research Professor with the Ilmin Institute of InternationalRelations at Korea University and an adjunct professor at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writes, "Since President Lee took office, Pyongyang has been getting mixed signals from Seoul between engagement and confrontation, as it did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during its first six years - between negotiation and regime change... Nobody can predict the timing or the likelihood of a demise of North Korea. That's why it is important to resume dialogue and avoid a costly consequence -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 from confrontation."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or position of the Nautilus Institute.Readers should note that Nautilus seeks a diversityviews and opinions on contentious topics in order to identify common ground. ……

김동현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명박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측에 포용과 대결의 혼재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부시정권 초기 6년간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함. 북한의 수차례의 걸친 위협과 경고는 이명박정권의 대북한 자극적 행동에 기인함. 북정권의 입장을 존중하고, 남북 정상 간의 2차례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함. 북정권의 미래와 운명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대화를 지속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Obama's victory gives North Korea a choice
오바마의 승리가 제시하는 북한의 선택

-- 11월 5일 UPI Asia

출처:http://www.upiasia.com/Security/2008/11/05/obamas_victory_gives_north_korea_a_choice/5451/

Barack Obama's victory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will offer a chance for North Korea to build confidence with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and achieve its long-standing goal of normalizing diplomatic ties with Washington, officials and analysts in Seoul say.

But they warn North Korea could face tougher challenges than it did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unless the communist country gives up its nuclear program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election of Obamais welcome news for North Korea," a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said, noting that the Democratic candidate has vowed to pursue "aggressive, sustained and direct diplomacy" in dealing with Pyongyang.

Obama has tried to distance himself from the Bush administration's hard-lin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highlighted by his labeling of Pyongyang as a "rogue state" and a charter member of the "axis of evil."

……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민주당 행정부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오랜 염원인 워싱턴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남한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밝힘.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 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과 거리를 두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밝혀왔음.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에 고무되어 더욱 대담한 요구를 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결실 있는 대화가 어려워질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함.

日本独自に北朝鮮を「テロ国家」指定、民主が追加制裁案 일본, 독자적으로 북한을 「테러 국가」지정, 민주당 추가 제재안

-- 11월 6일 요미우리신문

民主党の拉致問題対策本部（本部長＝中井洽・元法相）は5日の役員会で、北朝鮮に対する独自の追加経済制裁案をまとめた。

日本独自に北朝鮮を「テロ国家」に指定することや、輸出と送金の全面禁止など、政府の制裁より厳しい措置を盛り込んだとしている。

制裁案は計13項目。北朝鮮人権法を改正し、北朝鮮を「テロ国家」に指定。同時に、<1>北朝鮮への渡航禁止 <2>在日朝鮮人の再入国禁止 <3>北朝鮮および関連金融機関・口座への送金禁止 <4>国内金融機関の北朝鮮及び関係団体との取引禁止 <5>北朝鮮への輸出の全面禁止 <6>北朝鮮がチャーターした船舶の入港禁止――など、ヒト、モノ、カネの出入りを全面規制する。朝鮮総連や関連団体施設に対する課税減免措置もなくす。

민주당 납치문제 대책본부(본부장=나카이 히로시· 전 법무장관)는 5일 간부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경제 제재안을 확정했다.

총 13개항으로 이루어진 제재안은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하면서 사람, 물자, 돈의 출입을 전면 규제하는 등 현재의 제재 내용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北朝鮮の核検証「合意内容は文書に」で日中首席代表が一致 북핵 검증, 「합의 내용 문서화」에 일중 수석대표 합의

-- 11월 8일 読売新聞

北朝鮮の核問題を巡る6か国協議の日本首席代表を務める斎木昭隆・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長と、中国首席代表の武大偉外務次官が7日、北京の中国外務省で会談した。

日中首席代表は次回協議の焦点である核計画の検証手続きに関し、合意内容を文書で確認する方針で一致した。

日本側は核無能力化の見返りとなる北朝鮮への経済・エネルギー支援に関し、拉致問題の進展がない限り参加しない方針を改めて説明。中国側は「支援は6か国協議のプロセスで重要な問題だ」と指摘した。

……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 사이키 아키라륭·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중국 수석대표 무대위 외무차관은 7일 북경의 중국 외무성에서 검증 수속과 관련하여 합의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천 논문

11.4 미국 대선 결과와 북미관계 : 전망과 과제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전협정상 '교전관계'인 미국의 대통령으로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됨으로써 북한은 오랜 숙원인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당선자가 공언한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힘을 통한 패권 안정보다 개입과 소프트파워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는 말기에 선핵 폐기라는 기존의 정책을 바꾸어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단계별 일괄타결방식의 북핵 해법을 수용했다. 이로써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연속성 있게 북미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 매케인이 부시 초기의 선핵 폐기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의 오바마가 부시 말기의 정책에 유사했기 때문이다.

'적대국 지도자와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했던 오바마는 클린턴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현 시기에 맞게 수정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해결 방식은 '폐쇄→불능화→폐기'라는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해법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할 경우 '출구론'에 따라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인 해법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관계정상화 등 현안을 일괄 타결할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중국정책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잠재적 적이 아닌 상호의존적 협력대상으로 가정한다면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문제 해결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는 MD체제 구축의 빌미를 북한위협론에서 찾기 위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며 북핵 해결을 서두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유의 확산'이란 명분 아래 북한의 체제 교체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봉착한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중국을 자극하는 MD체제 구축보다 영향력 확대를 통한 세계적 리더십 회복을 위해 경제문화 중심의 상호의존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개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화할 것이다.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해소해야 하는 북한도 오바마의 당선을 환영할 것이다. 아직 공식적 논평은 없으나 "조선의 지도자와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공언해온 오바마가 네오콘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매케인보다 낫다"는 조선신보는 보도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관계는 물밑접촉 등을 통해 상당히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ifes.kyungnam.ac.kr/admin/upload_file/notice/20081106_ifes.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노동신문에서 '북남 공동선언은 철저히 리행되여야 한다' 보도

○ 11.9 노동신문은 "6. 15공동선언에는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우리 민족끼리》 리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10. 4선언은 6. 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선언에는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이 천명되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지지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함께 손잡고 힘과 뜻을 모아나가야 한다.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련대조직인 6. 15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하며 그에 기초하여 북, 남, 해외의 3자련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